

총선 6개월 앞으로

조국 사태 항방이 여야 운명 가른다

조국 정국 두 달...여야, 세걸집 주도 극한 대치

내년 총선 안갯속...중도층 민심은 어디로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총선을 6개월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는가 하면 중도층의 이탈이 목격되며 휘청이고 있다.

두 달 넘게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파장 탓이다. 6개월 후 총선 때까지도 이번 사태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조 장관 사퇴를 외치는 야권과 방어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 최대 국정 과제의 하나인 검찰 개혁의 항방까지 확대될 공산이 큰 이번 '조국 불라홀'을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내년 총선에서 여야의 운명을 판가름할 전망이다.

출구 전략이 더 급한 쪽은 민주당이다. 아직 자유한국당 등 야권 대비 지지율이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문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에서 보여지듯 민심 이탈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조 장관에 대한 민심이 극명하게 갈린 만큼 결말을 떠나 조국 정국 자체가 지속되는 것이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만약 노골적으로 날을 세운 검찰의 수사 결과로 조 장관이 사퇴한다면, 여당은 총선에서 지금의 의석수를 지키지 못하고 문 정부 임기 후반기 국정운영 동력마저 잃게 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조 장관 임명 초기 내부에서도 잡음이 적지 않았던 만큼 민주당의 '원팀' 프레임도 시험대에 오를 수도 있다.

특히 바른미래당의 경우 유승민 의원 등 바른정당계 의원들의 항방과 안철수 전 대표의 정계 진출 가능성 등이 뒤섞여 중도층 민심은 물론 보수 세력 결집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당의 총선 필승 전략에는 '보수 통합'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한 만큼 야권의 내부 분열로 조국 정국에서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여당의 벽을 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 장관이 퇴진하지 않는다면 한국당 내부도 흔들릴 여지가 있다. 게다가 군소정당에 유리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당의 세걸집 시도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조 장관 여파의 결말을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현재 한국당의 '투쟁'의 모습으로 민주당도, 한국당도 싫다는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정쟁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당은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제출을 검토 중이다."

광화문 집회에서 서초동 집회를 넘어선 흥행을 확인했으나 아직 완전한 보수 통합을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중론이다. 바른미래당은 내분이 장기화하고 있고, 민주평화당에서 빠져나온 대한신당(가칭)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조국, 검찰개혁논의 당정청 협의회 발인 조국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검찰개혁관련 논의를 했다.

'검찰개혁' 고위당정...조국 "무슨 일 있더라도 끝 보겠다"

이낙연 "개혁 못이룬다면 검찰 위해서도 불행한 일"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가 13일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검찰개혁 추진계획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오늘의 검찰개혁 추진은 종결이 아니라 출발이어야 한다"며 "제도과 조직의 변화에 머물지 말고 행동과 문화의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그는 "국민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검찰의 조직 문화와 행동에 있다"며 "지금 검찰개혁이 뜨거운 의제로 떠올랐다. 이런 계기에도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검찰 자신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법무부장관도 검찰 개혁에

관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을 봐야 한다"며 "흐지부지하려고 하거나 대중 끌려고 하는 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의 입법화, 제도화가 제대로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시작"이라며 "검찰개혁의 방향과 시간이 정해졌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청협의회의에는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국 법무부장관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올라온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조정 등 두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해 검찰 개혁의 마침표를 찍겠다"며 "다행히 이달 말부터 두 법안을 본회의의 상정해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김윤호 기자

뉴스1



'지일파'李총리 일왕 즉위식

참석...한일관계 구원투수 될까

文대통령 메시지 전달하고 양국 정상 회담 전인 주목

정부 내 대표적 '지일파'(知日派)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22일 열리는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 참석을 계기로 막대한 한일 관계를 풀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눈길이 쏠린다.

즉위식 다음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부부의 각국 정상급 초청 만찬이 예정돼 있는 등 일본의 고위급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이에 이 총리가 축하사절단으로 참석해 아베 총리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메시지 등이 담긴 친서를 전달하는 등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한 구원투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흘러 나온다.

총리실은 13일 이 총리가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행사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2박3일간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총리실은 이 총리가 22일 즉위식 및 궁정 연회에 참석하고 23일에는 아베 총리가 주최하는 연회에 참석하는 한편 일본 정계 및 재계 주요인사 면담, 동포 대표 초청 간담회 일정 등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일찌감치 일왕 즉위식 참석을 희망해왔다.

그는 지난 3월 중국 총칭 방문 당시 기자들과 만나 방일 계획에 대해 "6월 오사카에서 열

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10월 일왕 즉위식이 있는데 자연스러운 계기가 있어야 할 것 같다"며 "G20 회의는 제일이 아닌 것 같고 그다음은 모르겠다. 할 수 있다면 도쿄 뒷골목 같은 데서 술 한잔 마시고 도쿄 시민들한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총리의 이번 방일은 연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우리 법원의 현금화 조치가 단행되기 전 한일 관계를 풀어줄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어 더욱 관심이 모인다.

이번 방일 중 이 총리와 아베 총리의 회담이 성사된다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약 1년 만에 양국 최고위 지도자가 공개석상에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일본 NHK는 아베 총리와 이 총리가 단시간 회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기자 시절 일본 특파원을 지냈고 국회의원 시절 한일의원원맹 간사장·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했던 이 총리가 아베 총리를 만나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정상 간 대화 가능성을 타진하는 등 한일 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지 자연스럽게 눈길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뉴스1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분 한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민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광고 직통 ☎ 062)224-5800
팩 스 222-5547

한정승인공고

사건번호: 광주가정법원 2019년 단 3420 상속한정승인
사망자: 김남순(430215-2622417)
최후주소: 광주 남구 응정길 21, 101동 702호(주월동 경남아파트)

위 망 김남순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19년 10월 14일

공고인: 이대호
주소: 광주 남구 봉선로96번길 1, 102동 106호(봉선동, 대화아파트)
한정승인수리일: 2019년 10월 2일
공고기간: 2019. 10. 14~ 2019. 12. 14

호남신문 공익 캠페인

“ 딱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입니다 ”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다함께 약속해주세요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 원청이 안전 →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 직장내 괴롭힘 → 금지 범인이 명백해 되었습니다.
- 정시간근로는 →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노·사 간에 갈등이 있나요?

- 전남에는 노사민정 세력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 노사가 서로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무료 지원해 드립니다.
- 임금, 퇴직금, 해고, 신제 단체교섭 조율 등 노동문제에 어려움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 노동조합 등 누구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상담전화 062) 524-9666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 전라남도노사민정조정위원회